

#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인가?

글 ·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시민 각자의 교양 있는 참여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자유의사의 처분결과에 대한  
 성찰적 자기반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해방 정국을 맞아, 개화기에 이미 미국 유학을 다녀왔던 윤치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땅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 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을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지난 헌정 6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실제로 장전된 실탄이 터진 일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굳이 한국사회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난 세월 거의 10년을 주기로 폭압과 소외, 억압과 분출의 역사를 거듭해야 했다.

## 오늘의 우리를 지구촌 전역이 경이와 경외의 눈으로 지켜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회고적 현실(retrospective reality)로서가 아니라, 전망적 현실(prospective reality)로서만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했던 셈이다.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는 발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고 절차적 차원에서나마 정치적 민주화의 길을 연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다. 식민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가난의

신고와 독재의 유린 속에서도 중진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우리를 지구촌 전역이 경이와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굳이 한류의 열풍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보는 우리의 미래는 이렇듯 장밋빛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G20 회원국만 선별해 집계해 보면,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및 영국에 이어 8위에 올랐다. 프랑스,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평가와는 달리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

계층 간, 지역 간, 영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여전하고 오히려 갈등의 간극은 악화일로에 있다. 갈등의 양식이 과격성, 이기성, 극단성, 불법성을 띠고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안개발과정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갈등을 통해 지대를 취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냥 둘 경우, 사회공동체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경제발전도 지금까지는 외국의 발전경로를 모방하는 것만으로 가능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지구경제체제 하에서는 한국적 표준을 정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짜지 않고서는 제자리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동적 발전이 아니라 능동적, 주도적 개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모방발전의 단계를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지닌 가용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지나 실체적 민주주의 심화 단계를 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돌이켜 보면 전통사회에서 식민적 지배를 거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계급적, 경제적 평등이 확대되었다. 식민의 수탈경제가 불러온 빈곤의 평준화나 전쟁의 참화가 가져온 기존 질서의 파괴가 역설적으로 반상의 계급이나 지주와 마름의 관계를 허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해야 할 자유에 대해서는 이를 관찰하거나 향유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유교의 수직적 사회질서와 관존민비, 군대문화가 불러온 상명하복, 집성촌이나 가문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 의식 등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관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개인주의의 발흥을 막았던 것이다.

자유인의 자성에 의한 자기통제 없이 평등주의가 판을 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동안 고삐 풀린 망

# Civic Education

아지거나 제도장치를 결여한 기관차와 같았다. 사익 간의 충돌과 갈등이 주저 없이 분출했으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무리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다.

자유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이지만, 공동체적 질서의 창출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 각자의 교양 있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권을 약속한 국가마저 자신의 언명에 구속된다. 그런데 시민 각자의 교양 있는 참여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자유의사의 처분 결과에 대한 성찰적 자기반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단순한 제도 개혁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제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이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87년 체제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발흥이었다. 그러나 자기 성찰력을 구비하지 못한 시민이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없는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기능적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결국 성찰적 자기결정력을 구비한 시민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은 연목구어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회의 도래는 시민중심주의의 중요성을 보다 더 확장하게 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유동성 증대는 국가의 전문가적 우월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민의 선호나 정책적 의지를 국가라는 대리인 체제를 통해 구현하는 일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전환비용의 지출을 요구한다는 인식도 싹트게 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시민은 과거의 신민이나 소극적, 수동적 시민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자본 축적 필요해

이런 현상은 우리의 경우 이미 촛불집회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시민의 등장이 “영리한 시민권(smart citizenship)”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는 것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이면서도 자기 성찰력을 지니는 자유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추적해 보면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자본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사회자본은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 체험 속에서 빛어지는 일종의 집단유산에 해당된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통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이 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점진적, 누적적으로

##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적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와 지식을

삶의 일상에서 체득하여 체화하도록

훈육하는 일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체득해 왔던 것이다.

그런 서구사회에서조차 정보사회의 도래가 기존의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바꾸는 대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그런 사회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신시민의 배출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민주시민교육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국의 지구시민교육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같은 지구화 시대에는 전통적인 시민권이 상정하는 일국주의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고 사고하

는 신시민의 배출 없이는, 자기 공동체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하물며 아직 자기결정력을 배태하는 시민성 내지는 그런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자본 자체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사회 전체가 나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자유인의 성장에 필요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우리가 성찰적 자기 관리능력을 지닌 적극적 시민을 단기간 내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외에 왕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엇이 민주적이며 무엇이 민주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고, 왜 무엇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며, 민주적 삶을 영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체득케 하는 일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자원에 해당된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적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와 지식을 삶의 일상에서 체득하여 체화하도록 훈육하는 일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민주시민교육이 참여교육의 양식을 띠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것도 자명한 이치다. 학교교육과 함께 성인교육을 동시병발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국가나 시민사회가 혼자서 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일종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보다 더 효과적일 것도 당연한 이치다.

